SECTION 2

예산절감의 방법과 기술

1. 사업추진 단계별 절감
2. 인건비 절감
3. 에너지 절약
4. 수입 확충
5. 기타 재정관리 효율화



1. 사업추진 단계별 절감

(1) 계획·예산편성 단계

①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검토

- 당해사업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하고, 현 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추후에 재검토

예산낭비사례 ○○부 하수종말처리장 개량계획 인가 부적정

○○부는 자치단체가 신청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을 검증한 후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수질기준이 적합하거나, 소규모 시설보완·운전방식 개선으로 수질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공사 여수로 공사 부적정

○○○공사는 단순히 홍수기 제한수위 조정 등을 통해 댐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로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환경오염을 야기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교육청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적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에 설치된 단독정화조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오수처리시설로 대체·개선할 필요가 없음에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설치비 및 위탁 운영비를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외국인 유치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읍 ○○리 일원(17천평)에 2001년도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포함하여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외국인 유치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시('01.6.1) 조건부로 승인(재원확보방안 강구후 사업추진) 하였음에도, 부족한 재원(2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2003. 1월 감사원 감사시 사업타당성 및 재원확보계획 재검토 후 사업을 추진토록 '주의' 처분('03.6.16)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 사업비(21억원)를 3년간 방치하다가 타 사업으로 용도변경('06. 5. 9)

또한, 직접경비(건축비 등)에 사용하여야 할 특별교부세를 '01~'02년까지 토지매입(376백만원) 및 용역비(243백만원) 등으로 61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변경으로 인해 용역비를 낭비(243백만원)하는 결과 초래 –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가장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내용, 대상지역, 수혜자 등을 선정

예산낭비사례 **○○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부는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려없이 단순히 자치단체가 임의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신청한 대로 사업비를 배분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잦은 16개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사고가 거의 없는 46개 지점을 사업대상에 포함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예산편성전 사업내용, 필요성, 활용방안 등을 사전 심의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 방지

예산절감사례 **대전광역시 용역사업 및 사업용 장비 구입 사전심의제 운영**

용역사업과 사업용 장비 및 기계·기구 구입에 대하여 예산편성전 용역사업 내용과 사업용 장비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등을 심의하여 업무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용역비 과다산정 조정, 기 연구 실적 및 기존 자료 활용, 과도한 용역사업 의존을 자체 인력을 활용한 사업추진 등으로 예산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낭비사례 ○○○○단지~○○○간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03년 주민숙원사업인' ○○○○단지~○○○간 도로공사(3km, 사업비 77억원 : 국비 10, 시비 67)를 시행하던 중 '05년부터 시비보조가 지원되지 않자 아무런 대책 강구 없이 '06.3월 공사를 중지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도로가 단절(80m)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교통시설물은 도로개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에도 가로등 주 43개소 등을 개통전 일괄 설치함에 따라 139백만원이 사장되는 등 투입된 예산 총 4,139백만원이 사장되는 결과 초래

–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예산낭비사례 ○○○센터 건립공사를 추진 부적정

주변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진입도로 확보도 없이 무리하게 ○○○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하다가, 기존 진입도로가 폐쇄되어 별도의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진입도로에 기 시공된 기반시설(상·하수도 등)이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 낭비(약 87백만원) 초래

–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방지

예산낭비사례 인삼 연구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청은 인삼시험 연구동 신축부지 및 진입도로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의 매입 가능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인삼시험연구 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한 결과, 부지매입 지연으로 집행이 어렵게 되자 타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덕수궁 복원정비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청은 덕수궁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 시설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결국 예산을 당초 세출예산과 관련없는 다른 사업에 집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② 유사·중복된 사업 시행 혹은 타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관련 부서 혹은 기관간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함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사업규모를 적정화

예산낭비사례 **온라인 게임엔진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부와 ○○부가 추진하는「온라인 3D 게임엔진 개발사업」과「통합 플랫폼 게임 기술개발사업」은 주요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나 공동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비효율적인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당해 시설(건물 등)이 다른 부서 혹은 기관에서 설치하였거나 혹은 설치예정인 인근지역의 다른 시설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사업규모를 적정화

예산낭비사례 **○○군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부적정**

○○공사에서 ○○군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군 자체의 정수장을 별도로 신·증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공사와 협의없이 ○○정수장 확장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유사한 성격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건립하지 않고,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소관부서간 협의하에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 추진

예산절감사례 **충남 금산 다락원 설치**

문화부(문예회관, 야외공연장), 복지부(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복지회관, 농림부(농업경영인회관), 체육진흥공단(실내수영장), 마사회(농어촌문화 체육센터) 등 7개 기관의 12개 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설계비·공사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였으며, 유사한 성격의 시설을 통합한 복합 다기능적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로 자리잡음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경북 문경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 통합 건립**

구 문경경찰서 부지를 활용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 및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주민 모두를 위한 복합시설건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노인복지관 및 분산되어 있는 문화원, 주민센터, 노인회시지회를 통합 건립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주민이용 편익 증대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은 최소화하고, 유사한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연구용역비를 절감

예산절감사례 **강원 화천 연구용역 통합발주**

2005년부터 추진중인 「군 기본계획 및 비도시지역 관리계획수립용역」과 2008년도 부터 추진할 「도시지역관리계획(도시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이 동일한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용역사업임을 알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2개의 용역사업을 통합 발주함으로써 사업기간을 최소화 하고, 중복되는 기초자료 조사·수집 비용을 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강원도 삼척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10명)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 사전 차단.

예산편성전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득한 후 예산편성 및 용역 발주토록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예산낭비사례 **유사 연구용역 분리발주에 따른 예산낭비**

'○○ 벨트 경관형성계획수립용역(5억원)' 및 '○○~○○벨트 경관형성계획수립용역(3억원)' 등 2건의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사업부서에서 '○○발전연구원'을 계약대상자로 임의 선정하여 계약부서에 수의계약 의뢰

과업기간 및 과업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2개 지구로 분리 발주, 연구원 인건비(133백만원)를 이중으로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

–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 기존 시설·장비를 개보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보수 및 연계활용 방안으로 사업내용 변경

예산절감사례 **부산시 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추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신축건물로 추진하지 않고 기존 동사무소 지하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함으로써 신축시의 소요비용 316백만원보다 50백만원이 절감된 비용으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예산절감사례 **강원도 홍천 구청사를 활용한 사무실 증축비 절감**

홍천읍 태학리 정수장내 위치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시 근무인원이 20여명으로 사무공간(100㎡)이 협소하여 증축 예정이었으나, 홍천읍 희망리에 위치한 구읍사무소(면적 258㎡) 청사에 200백만원을 투자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사무실 증축비를 절감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예산낭비사례 **○○원 무인 민원서류발급기 구매 운영 부적정**

○○원이 설치하려고 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기는 통신망 공동활용을 통해 행자부가 이미 설치하고 있는 무인 민원서류발급기를 개선하면 될 것이나, 이러한 협의없이 별도로 무인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기를 설치함에 따라 설치비 및 운영비를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지역내 혹은 인근지역의 다른 축제·행사와 유사·중복되거나 경제성이 낮은 경우, 여러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

예산절감사례 **전남 구례 지역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 통합개최**

전남 구례군은 '07년까지 「지리산 남악제(4.20)」와 「군민의 날 행사(4.23)」를 각각 개최하여 왔으나, '08년부터 두개 행사를 「남악제 행사」로 통합·운영하여 예산절감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예산절감사례 **경남 고성 중복성 마라톤대회 통합개최**

「남해보물섬 마늘마라톤대회」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하프마라톤대회」를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하프마라톤대회」로 통합 1개 행사만 개최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③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사전협의 실시

- 당해 사업 추진과 관련있는 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기업 등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사업추진 방식 등을 협의·추진하여 예산을 절감

예산절감사례 **강원 영월 시행주체가 다른 중복구간 사업 우선시행**

동강대교 건설공사(국토관리청)와 재해예방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배수펌프장 연결공사(영월군)가 120m 중복구간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동강대교 건설공사 기간(07~08년)중에 사업계획이 없었으나 이중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군비를 확보하고 동 기간내 중복구간에 대해 사업추진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강원 영월 하천 횡단 상수도 취수관로 사업비 절감**

영월군의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동강시스타 추진의 선행사업으로 방사상 집수정 취수원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하천을 횡단하는 상수도 관로사업을 진행하여야 하였으나, 2007년부터 관내 일원에서 진행중인 하수관거 사업(시행:환경관리공단)과 중복구간임을 인지하고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충북 증평 한국농촌공사에서 시공한 오수관로를 이용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안면 화성리 문화마을 조성사업(한국농촌공사)시 시공한 오수관로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증평3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노선을 설계변경 함으로써, 기존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함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인천 중구 북성동1가 동일APT일원 하수관 교체사업비 절감**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와 북성동1가 동일APT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의 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천교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한신공영) 부담으로 하수관 교체 및 이설공사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이중 공사방지 및 구 예산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낭비사례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당 시행**

○○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부두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광역시가 추진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투입하면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는데도 업무협의가 미흡하여 예산을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DMB 기술개발사업 부적정**

○○부와 ○○부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관련 기술개발에 대하여 양 부처가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서로 자기 부처 업무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각각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다른 기관 또는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한 사업의 동시시행으로 중복공사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제거

예산절감사례 **충북 제천 상하수관거 동시시행을 통한 예산절감**

제천시 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의 소관업무별 상수관 및 하수관의 동시시공을 통하여 굴착비용 등 예산의 중복투입 방지

이것은 상·하수도사업과 관련된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공유로 예산의 이중투자 사전방지 및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다른 기관의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어 협의한 경우,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규모·범위 등을 조정

예산낭비사례 **광산물 비축사업 관련 협의결과 미반영**

○○부는 광산물 비축산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와 협의한 결과, 조달청의 비축품목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이를 조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비축시설 설치 예산을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이나 시설·물품·통계자료 등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신규로 설치·구매·조사하기 보다는 공동 활용방안 강구

예산절감사례 **서울시 소모성물품구매관리시스템(MRO) 도입·운영**

각 부서별로 개별 구입해 왔던 각종 소모성 물품(복사용지, 프린터/복사기 토너, 기타 사무용품 등)들에 대한 구매 프로세스 개선(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하여 업무효율화 및 예산낭비요소 제거. 온라인 일괄구매 단가계약을 통한 가격 표준화 및 구매비 절감, 지출절차 간소화로 업무량 경감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예산낭비사례 **통계자료 공유 미흡에 따른 낭비**

○○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11개 항목중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청이 관리하는 사업자 등록자료와 중복되어 ○○청 자료를 활용하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조 미흡으로 자료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함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협의가 가능한지, 협의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 지연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의·조정 수행

예산절감사례 **순천시와 익산국토관리청간 업무갈등 조정**

신대배후단지 진입도로와 단지 외곽에 있는 국도가 입체교차하는 부분의 일괄시공을 요구하는 순천시와 분리시공을 주장하는 익산국토관리청 간 갈등이 야기되었으나, 순천시가 진입도로 통과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신대배후단지 진입도로 교차부분에 대한 일괄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여 예산낭비 방지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부 양식단지 조성사업 협의 실패에 따른 중단**

○○부는 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앞서, 당해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인 경우 ○○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뒤늦게 추진하다가 사업이 지연되었고, 결국 사업을 중도에 포기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사업시행전에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 토사 등의 무상사용을 통한 예산절감

예산절감사례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장 발생 토사 재활용**

관내 공원 및 녹지조성과 관련하여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양질의 토사가 필요하였으나,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연장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사 운반 및 구입비 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울산광역시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사무대(無代) 반입**

낙후된 울산 서부지역의 발전과 대우버스(주)의 울산이전에 따른 협력업체의 이전을 위하여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철저한 현장관리 및 성토용 토사의 무대반입으로 20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④ 사업 시행 및 비용부담 주체의 적정성 검토

- 사업의 공익성이 낮거나,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전문기관위탁·민자유치 등을 통한 시행 검토

예산절감사례 부산광역시 민자유치를 통하여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북항 해양문화지구에 예술의 전당(오페라하우스+음악당+전시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부산문화의 랜드마크로서 공연문화와 관광의 명소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재정부담(2,400억원 예상)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토록 롯데그룹을 설득하여 1,000억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키로 약정 체결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 롯데백화점앞 육교 재 가설

기존 육교는 1987년도에 준공한 육교로서 지하철 명륜역사와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 지하철 이용이 불편하고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 편의시설이 없어 오래전부터 현대식 육교설치가 시급한 실정이었음

롯데백화점 동래점 증축계획과 연계한 민자유치(롯데백화점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재가설 사업비 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민의 숲” 조성 민자유치(MOU)

민선 4기 공약사항중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유성 “시민의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추진

향토기업인 계룡건설(주)에서 나무심기운동에 동참하고자 2007년 4월 18일 제안서를 제출하여 2007년 4월 20일 민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추진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대전광역시 중구 방역소독방법 위탁추진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의한 연막소독에서 민간전문소독업체 위탁 추진으로 인건비 절약 등 효율적인 방역체제 구축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충북 단양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전문기관 위탁**

지방상수도의 원가절감과 비효율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값싼 수돗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고, 상수도사업이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전북 전주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운영 전문기관 위탁**

사용가능한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되어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 중단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청소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의 민간전문기관 위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 체계 구축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민간위탁보다 적정한 경우,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하여 직접 수행

예산절감사례 **강원도 철원 하수종말처리장의 직영을 통한 운영비 절감**

'06년도 김화·갈말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였으나,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직영으로 운영중에 있는 바,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스템이 기존 운영중인 시설과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그간 축적된 수처리에 따른 관리기술 및 기존 운영중인 분뇨처리 시설의 인력을 활용한 직영체제로 운영함. 그 결과 인력감축 등을 통해 '07년도에 443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분뇨처리시설과의 연계운영으로 수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었음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공기업 등에 대한 과다한 출연·출자금 교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기관의 사업내용, 수입구조 등을 엄밀히 조사

예산낭비사례 **재투자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출자금 과다교부**

○○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출자규모를 물값 현실화정책의 추진상태에 따라 수입으로 확보되는 재투자재원의 규모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건설사업비 전액과 댐 보상비의 50% 이상을 과다하게 출자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자치단체 내부 공무원이 적은 경비로 직접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에 대한 용역 발주 등 지양

예산절감사례 인천 소규모건설사업시행 자체설계반 운영

매년 읍·면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건수가 약 250~300건 정도로 외부용역 수행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던 것을 자체 기술력을 가진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체설계반을 구성하여 설계함으로써 업무능력 향상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대전 서구 합동설계반 운영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자체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예산절감, 건설공사 조기발주, 기술직 공무원 능력배양 제고에 기여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강원도 빙상경기장 시설기본계획 보고서 자체작성 발간

건축설계 용역이전 법적 이행사항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기본계획보고서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작성 발간하여 예산절감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고, 민간이 당해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사업비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협의

예산절감사례 대전 노은역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

노은역 주변의 늘어난 주차수요를 해결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도시철도 환승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은역 동편광장에 지하주차장 및 지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비 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민간, 공사 등과의 협약체결·공동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목적 달성 및 예산절감

예산절감사례 **부산시 부산지하철 광고를 통한 공연홍보**

순수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공연홍보는 마케팅 전략상 아주 중요하나, 포스터 부착은 한정된 장소에만 가능(지정게시판)하고, 기타 장소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다중집합장소 공연홍보 추진을 위하여 부산지하철 광고대행 업체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960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연홍보 극대화에 기여하였음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부산시 언론·방송사와 공동주최를 통한 공연홍보**

공연홍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언론, 방송사)를 통한 홍보라고 판단하고, 언론·방송사와 공동주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함으로써 신문광고 및 공연기사·방송사 TV-Spot 광고 및 자막 광고를 통한 공연 소개로 부족한 공연 예산을 절감하고 순수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및 공연홍보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⑤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실제 필요한 것보다 많은 규모로 편성한 후, 남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예산낭비사례 **○○본부 부대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본부는 부대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부대수보다 더 많은 부대수를 적용하여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이 삭감된 다른 사업 등에 집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중장기 수요 변화를 고려할 때, 사업 규모가 수요보다 과다하게 정해진 경우, 사업계획 수정을 통해 적정규모로 축소 조정

예산낭비사례 **○○-○○간 경전철사업 교통수요 과다예측**

○○부, ○○광역시, ○○시는 위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의 90%보다 적을 경우 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으나, 민자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운영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교통수요를 과다 예측하고 주무관청에서 교통수요의 적정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매년 거액의 운영수입 보장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군 ○○정수장 용수공급시설 과잉 투자**

○○군은 잘못된 연구용역 결과에서 과다하게 예측한 장래 계획인구를 정정하지 않아, 현행 시설로도 용수공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정수장 건설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청 물동량 변동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항만시설 추가 설치**

○○청은 부산신항만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컨테이너 검색기 1대로도 2009년까지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며,
가동 선석 수가 3배로 늘어나는 2009년 이후에 추가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무리하게 추가 도입을 추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자치단체내 혹은 민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예산에 반영된 경우 적정규모로 조정

예산절감사례 **충남 아산 착수에서 준공까지 하나로 clean system**

전문가 「자문위원회(148명)」 및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별 자문TFT」가 주축이 되어 사업, 용역, 물품구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착수에서 준공까지 하나로 클린 시스템」 운영으로 고질적 부조리 발생 부분인 계약 체결·집행과정에 재정·설계심사제를 도입하여 투명성 확보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⑥ 재정투·융자 심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철저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등이 정하고 있는 재정투·융자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심사결과를 준수

예산낭비사례 ○○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도는 재정투·융자사업심사 의뢰 전에 이미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자치부가 심사결과 민간투자자를 우선 선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예산을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전시관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2004 ○○○○엑스포 행사' ('04.10.13 ~ '04.10.17) 일환으로 '○○○○전시관 시설공사' ('04.7.8 ~ '04.10.12, 160억68백만원)를 추진함에 있어, 동 엑스포 행사 개막전 준공을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자체심사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사업비를 29억원으로 축소(30억원 이상은 전북도에서 심사)하였고, 입찰대상인 실시설계용역비를 임의로 축소(46백만원→32백만원)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한, 실시설계용역결과 공사기간을 90일로 산정하였으나 엑스포 행사기간내 완공을 위해 절대공기를 70일로 축소하여 긴급공사 입찰실시 및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동 공사 부지는 바다뻘 매립지역임에도 지반성토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미준수로 부실 초래

동 시설물 준공 후 바닥침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지반보강공사 추가실시(약 5억원 소요), 총체적 부실로 예산낭비

–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사전심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 진행후 사업진행

예산낭비사례 **○○도서관 신축 추진 부적정**

○○도서관 신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17억65백만원을 투입, 공공청사용지를 매입(1,070평)한 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요청('04.11.30)하였으나 부결되자, 인근 ○○공원 부지 일부(612평)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기 매입부지는 18개월째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키 위해 1억원을 투입, 도시관리계획 재변경 진행중

–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⑦ 사업 추진일정·기간 적정성 검토

- 사업 집행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늘어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단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및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

예산낭비사례 **○○원 총 사업비 과소 책정에 따른 낭비**

○○원은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사업 추진시, 당초 총사업비를 499억으로 책정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1,409억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공사완공시점이 지연되고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기간연장 및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

예산낭비사례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연)**

○○시에서 당초 '04년 ~ '10년까지 사업비 3,517억원(국비 50%)을 투자하여 총 13.51㎞를 개설하려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08년까지 지방비 1,758억원은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국비는 동 기간중 당초 국비사업비 1,758억원중 51.5%인 907억원만이 지원되어 '09년 ~ '10년 기간중 851억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부득이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여 입주업체들의 기업활동 저하 및 물류수송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 유찰,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비 규모를 축소하고, 차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

예산낭비사례 **○○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제2공구) 국고보조금 교부 부적정**

○○○시 소관 제2공구 정비사업은 2003년 5월 시설공사 입찰이 2차례 유찰되는 등 공사 지연으로 2004년 예산 749억 6,600만원 가운데 579억 4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05년 말까지 예정공정률이 50% 정도로 2005년 예산 역시 연도 내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5년도에 배정할 계획이었던 국고보조금 357억 8,500만원은 교부하지 않아야 했으나, ○○청은 예산을 불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교부할 경우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그대로 교부하여 ○○○시에서는 위 2005년 보조금 357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622억 4,4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음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국고보조사업은 당해연도에 토지매입, 입지선정, 도시계획 등 사전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예산집행이 가능한 경우 및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예산낭비사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추진 부적정**

○○시는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을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사전에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변경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약 5년간 집행하지 못함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광역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문화산업단지 지정의 실익이 업다는 사유로 단지지정을 하지 않고 문화관광부와 변경 협의없이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등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비 미확보액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음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2) 계약 단계

① 최적의 설계방식 채택

- 설계공법 채택시 경제적이며 고품질 확보가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예산낭비사례 **하천 제방의 배수시설물 설계 부적정**

○○지방국토관리청은 경제적이고 품질 확보도 용이한 콘크리트 시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력을 이용한 현장 콘크리트 타설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부실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예산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향상으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여 견실한 건설공사 시행

예산절감사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사전 설계심사제 운영**

총공사비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토목, 건축분야 등), 설계 변경하는 경우로서 1회 변경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집행전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심사로 경제적인 설계·시공유도,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변경 최소화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다양한 설계방식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설계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예산낭비사례 **○○부 재해상황 시스템을 시·군·구가 각각 개발토록 하여 낭비**

○○부는 재해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고 설치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중앙집중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검토하지 않은채 각 시·군·구에 보조금만 교부하여 소규모 장비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서 예산을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수해쓰레기 처리 설계용역 발주 부적정**

「예정가격 작성기준」제30조에 의거 수해쓰레기 처리는 단순 설계용역에 해당됨에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용역대가인 직선보간법으로 설계·발주함에 따라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고(189백만원), 건설공사 설계용역품 적용으로 예산낭비(76백만원) –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함으로써 과다한 물량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

예산낭비사례 **○○○ 서측 순환도로 설계 부적정**

○○광역시는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부·평지부 종단경사도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공사비를 낭비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을 훼손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하천 제방의 배수시설물 설계 부적정**

○○○도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건설교통부의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무편람'에 정한바와 같이 5센티 두께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10센티 두께로 산출된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그대로 공사계약을 맺음으로써 예산을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② 원가심사 실시

- 계약 체결에 앞서 원가심사·설계경제성 검토(VE) 등을 통해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

예산절감사례 **인천광역시 설계경제성 검토**

대형공사 발주물량 증가와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 공사비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0억 이상 대형건설사업에 대한 설계경제성 검토제도를 실시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대전광역시 사전설계심사제 운영**

건설공사 집행전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심사로 경제적인 설계·시공 유도로 부실 공사 방지, 설계변경 최소화와 적용공법의 면밀한 검토로 기술력 향상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각종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철저한 원가심사를 함으로써 부실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 극대화

예산절감사례 **서울시 계약심사과 설치**

서울시는 계약심사과를 설치하여 토목·건축 등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철저한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계약관련 전문성을 제고

– 서울신문 '08.5.27 14면, 동아일보 '08.5.28 31면 –

'서울신문

2008년 05월 27일 화요일 014면 행정

'계약심사제'로 6년간 1조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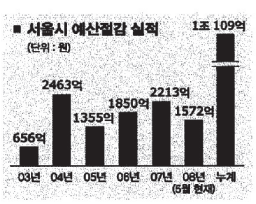
가양대교 6개 건설비 규모… 조달청 등 벤치마킹 나서

Zoom in 서울

#1 지난해 4월 서울 A지구. 서울시가 '계약심사제'를 통해 아파트단지의 지하층 굴착 순서를 바꿨다. 부지 면적이 넓고, 지반 여건이 좋아 공정 순서를 도로건설→터파기→구조물에서 터파기→구조물→도로건설 순으로 변경했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예산을 무려 41억원이나 줄였다.

도로나 상하수도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설치되는 흙막이벽인 '토류벽' 건설이 공정순서 조정으로 '자연사면'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2 지난해 11월 서울B지구 고덕천 제방 주변. 제방 높이 수준으로 설치되던 차수벽 높이를 낮췄다. 하천수 침입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 결과, 차수벽을 제방 높이만큼 올리지 않더라도 물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 관행에 의문을 품고 이를 바꿔 10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서울시가 2003년 2월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총 1조 10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에 준공된 한강 '가양대교'를 6개나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계약심사제는 사업부서에서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를 발주하기에 앞서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와 시공방법 개선 등을 점검해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시는 계약심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계서를 정밀 심사해 공사 물량이나 단가에 과다계상한 부분을 찾아내는가 하면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공정순서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공정을 뺐다. 특히 '심사왕 선발제'와 '공정별 전문심의제' 등을 도입해 계약 심사와 관련해 직원간 경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절감된 예산은 대부분 부채 탕감에 들어갔다. 서울시 부채는 2002년 1조 7664억원에서 지난해말 1조 3631억원으로 줄었다. 일부 예산은 아동·청소년복지사업과 도로·주택 건설사업에 투입됐다.

서울시의 예산절감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 부처와 일부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은 계약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시·도에 계약심사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울산과 포항 아산시는 이미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가심사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5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전문가로 이뤄진 원가분석자문단의 검토를 필수화하는 등 심사능력을 강화해 예산 절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예산절감사례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전담부서 설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광역시의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발주부서에서 설계 등 발주금액 산정시 관련규정의 착오 조정 등으로 예산의 과다계상 소지가 있어
계약 체결전에 이를 사전 심사·조정함으로써, 각종공사에 있어서는 부실방지 효과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자체 계약심사부서가 없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할시 공사설계 금액을 사업시행전 전문기관에 사전검토 의뢰하여 사업비 절감

예산절감사례 **강원 영월 수해복구공사 공사원가 사전검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하면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며 그 중 수해복구 등 재난관련 사업은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었으나, 영월군에서는 약 50억원의 수해복구 공사의 설계가 완료되자 이를 조달청에 설계검토를 의뢰
공사원가 사전검토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을 근거로 분석 공표된 “조달청 2008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약 162백만원을 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사업부서 혹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계약의뢰서에 적시된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원가에 계상하는 등 사업비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예산절감사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정심사기능제도 운영**

일정금액 이상(물품 1천만원, 공사·용역 3천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집행전 합리적인 원가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건전화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예산낭비사례 **○○부 전투식량 조달계약 재료비 단가 부당 정산**

○○부는 전투식량 계약금액을 정산하면서 품목별 단가는 사후 정산대상이 아닌데도 정산대상에 포함하고 업체가 허위로 작성·제출한 계산서를 근거로 정산하여 구매대금 과다 지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추진 부적정**

각 자치구에서는 연간 60억원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탁·계약함에 있어 자치구가 퇴직금과 법인세 등을 부담토록 하는 등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는 불리한 조건으로 특정업체와 10년 이상 위법하게 독점 계약함으로서 자치구에 재정부담 초래
위탁대행사업비 정산처리에 있어서도 지도·감독을 해태하여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적으로 사용토록 방치함으로서 예산낭비 초래('0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접대비 명목으로 1억 여원 집행)

–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계약상대자 등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의 거래실례가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정가격으로 계약금액 결정

예산낭비사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업무 부적정**

○○청과 ○○청은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체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지 7개월 전에 조사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계약금액을 과다 지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계약원가가 과다하게 높게 산정되지 않도록, 계약내용에 불필요한 항목 포함 여부, 단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수

예산낭비사례 **○○청 인쇄계약단가 적용 부적정**

○○청은 인쇄물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인쇄비를 지급하면서, 조달청장이 정한 인쇄기준요금에 따라 옵셋윤전 인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단가가 높은 매엽기 인쇄단가를 적용하여 인쇄비 과다 지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부 장병급식용 한우고기 단가 산정 부적정**

○○부는 실제 각 군수지원사령부에 숫소살코기만이 납품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전국의 축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살코기의 평균단가(암소와 수소의 가중평균)를 기준으로 단가를 협의·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달함으로써 예산을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③ 계약방법의 적정성 검토

- 계약의 목적·특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계약방법을 선택

예산절감사례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제조 및 구매의 수의계약방법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 소모품 연간단가계약 체결시행으로 부서별 특정업체와 계약 체결 등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또한 수의계약 방법의 개선으로 예산 절감 효과 기대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예산낭비사례 **공구분할로 인한 발주방식 변경으로 공사비 과다소요**

○○광역시는 공사 추정가격 500억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인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3공구를 지역 건설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등의 사유로 2개 공구로 분할하고 적격심사대상공사로 변경하여 발주함으로써 예산을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부 전투화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전투화는 제조에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수의계약 사유가 없으므로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매년 특정단체와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3) 사업집행 단계

① 사업집행관리

-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 변경이 예정되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 할 경우,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해·설득으로 차질없는 사업수행 및 예산절감

예산절감사례 **대구광역시 진천천 임시도로 설치 공법 변경**

구마고속도로 확장후 성서~옥포 통행방법(무료화–〉유료화)이 변경됨에 따라 달성지역 민원해소를 위해 남대구 IC~화원간 대체도로 구간중 화원유원지 입구 성산육교 철거에 따른 가교설치를 주민들의 강재를 이용한 가설교량 설치요구에 대해 설명회, 간담회 등 적극적인 이해·설득으로 흄관을 이용한 세월교로 대체하여 예산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신규사업을 재검토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목적 달성 및 예산절감

예산절감사례 **대전광역시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 관련 예산절감**

재래시장 활성화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시의 공영차고지를 매입하여 주차타워건립(제1주차장/300면 확보)한 후
시장 여론을 반영하여 제2주차장(약 200면)을 건립 조성 함으로써 당초 동구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대형주차타워건립비 260억원 대비 약 75억원 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형할인점 내 어린이도서관 설치운영**

수성구청과 이마트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이마트에서는 도서관 설치공간(317㎡)을 7년간 무상제공 및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구청에서는 장서, 비품을 구입하여 운영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사업이 계획된 예산과 인력 투입소요에 맞추어 집행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관리하여, 당초 계획된 예산과 인력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예산절감사례 **대전광역시 자체건설공사 "기술 감리단 운영"**

대형건설사업의 자체감리, 친환경공법 및 신기술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기를 단축, 조기에 개통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 최소화와 교통 소통의 원활화 ⇒ '07년 견실시공을 위한 심사로 11억원 절감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관계기관·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사업비 절감

예산절감사례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 2단계 공사 증설공사 토사처리비 절감**

공촌정수장 2단계 증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예정지로 토사를 반입함으로써 운반비를 절감함은 물론 경기장 건설에 토사 확보가 필수적임에 따라 운반비용중 일부를 서로 분담하도록 협의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인천광역시 을왕산 절토지역 수목 재활용**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일대 고도제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을왕산 절토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가 양호한 수목벌채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시 공원·녹지 및 환경이 열악한 항만지역에 이식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수목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도시환경정비에 기여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소관업무와 관련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 또는 별도의 T/F구성 등을 통한 노력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편의 증대도모와 예산절감 기여

예산절감사례 **서울시 서울메트로 지하철역사 장애인게이트 설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에 의해 지하철역사에 장애인게이트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06.2.26) 장애인게이트를 직원의 창의아이디어로 개발한 양방향 개폐 비상게이트로 설치

장애인게이트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여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뿐 아니라 제작단가도 장애인게이트에 비하여 설치개소 당 4,750만원을 낮춤 (5,000만원 ⇒ 250만원/개소)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예산절감사례 **부산광역시 전동차 역사의 스크린도어(PSD) 제어장치 개발**

기존의 스크린도어 신호방식으로 할 경우 400억 정도 예산이 과다로 소요되어 공사내 T/F를 설치하여 개발·연구에 착수. 전동차 역사의 스크린도어(PSD) 출입문의 개폐 방식을 변경(지상장치→차상장치)하여 예산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다른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업무량 경감과 감액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업무와 인력 조정

예산절감사례 **대구광역시『우편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예산절감**

우체국 「전자우편제도」, 등기우편 「환부불필요제」 및 이용우편요금 신용카드사용으로 행정효율성 제고는 물론 인력감축 및 예산 절감 효과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대구광역시 서구 과태료 체납고지서 우체국 전자우편 활용 송달**

자동차관련 체납고지서를 예산절감을 위해 전자우편제도 시행

전산자료 파일을 우체국에 통보하면 우체국에서 고지서출력, 봉합, 발송 등 일체의 작업 추진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예산절감사례 **대전광역시 “이츠대전” 책자의 우편 발송료 분석 절감**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감액제도 분석 책자무게 200g 이하일 때 55원을 절감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책자 무게를 205g→200g이하로 감량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관행적으로 수행해오던 업무를 제도개선, 기준마련 등을 통해 예산절감

예산절감사례 **대구광역시 상수도 검침업무 변경**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 사용량 100㎥미만의 급수전에 대하여 현행 매월 검침에서 격월 검침으로 전면시행하여 연간 812백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상수도 경영합리화 제고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대구광역시 공사원가 절감을 위한 토석반입 기준 마련**

도시지역 대량 순성토 공사는 일반적으로 주변지역이 임야, 농지, GB 등으로 인·허가가 곤란하여 설계과정에서 토취장 선정이 어려움
대형 순성토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원가 절감을 위해 PS단가 설계 후 토석반입 기준을 마련하여 총사업비를 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관리 시스템 공동개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용기 문전수거방식」 전환에 따른 수집·운반 체계 전산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거관리 및 예산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전북 전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

전국 최초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민자율 감량유도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 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사업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자료수집, 비교데이타 분석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사업비 절감

예산절감사례 **충남 계룡 상수도 정수공급기관을 경쟁을 통한 원수비용 절감**

대전시에서 부과하는 정수단가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인지
지방 상수도가 아닌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공급받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여 직접 공급받을 경우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공급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공급단가 인하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새로운 공급계약으로 공급단가를 인하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재활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수목, 자연석 등을 재활용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예산절감사례 **강원 인제 조경수 식재장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07년부터 유휴지에 각종 공사 시행으로 소실될 우려가 있는 우량소나무 및 활엽수를 이전 식재함으로써 관례적으로 지출되던 조경비 및 하자이식 관리비 등 169백만원의 예산 절감 및 조경수 관리 효과 거양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강원 양양 하천산출물 선별을 통한 자연석 비매각 친환경 건설자재 활용**

기존의 하천준설방법은 하천내 토사를 준설 후 지정된 야적장부지로 이동하여 토사를 일괄 매각하였으나, 금번 오색천에서 발생된 토사에는 자연석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야적장내에서 토사와 자연석으로 선별·분리하여 토사는 매각처리하고 자연석은 매각하지 않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장내 공사용 자재로 사용하여 친환경사업은 물론 자재비 2,400백만원 예산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외부용역으로 추진하여도 될 사업을 자체 기술진을 활용 직접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절감

예산절감사례 강원 태백 풍력발전기 자체 유지보수(A/S)추진으로 예산절감

2003~2006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추진 완료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의 유지보수를 자체인력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낭비요인 제거 및 21C 친환경 대체에너지 판매 수입으로 지방세수 확충 기여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제주도 풍력발전설비 유지보수 비용 절감

국내 최초 행원풍력발전단지 발전설비를 제작사 기술을 이수하여 도 전문운영요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인 담당공무원이 직접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시간과 점검비용 등 연간 2억원의 세출 예산을 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제주도 상수도시설 전기안전 대행 자체 선임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 관리자를 자체 자격있는 직원을 선임하여 전기안전검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절감효과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향 및 영상통신설비의 자체 유지보수 실시

음향, 영상통신설비의 장애 발생시 외부 전문기술자를 통한 유지보수로 재료비, 기술료, 인건비, 출장비용을 포함한 유지보수료를 지출하였으나, 통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유지보수 능력배양 교육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함으로써 인건비, 기술료 등을 절감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사업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 사업대상 확대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

예산낭비사례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대상 부당 확대**

○○부는 정밀매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 차량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저감장치 부착실적이 저조하자 관련 법령상 지원대상이 아닌 배출가스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및 배출가스 검사를 아예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사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예산을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신규 시설·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설·장비 등을 임차·리스하는 방안이 비용절감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

예산절감사례 **강원도 횡성 CCTV장비 임대(렌털) 사용**

CCTV 신규 구입을 추진하던 중 보안업체와 CCTV 임대사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년간 31,2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임대사용으로 장비 장애 발생시 즉각적 유지 보수가 가능해 졌으며, 3년후 최신기종으로 교체가 가능하게 되었음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예산절감사례 **전라남도 하천퇴적토 준설 시행방법 개선**

퇴적토 준설의 시행방법을 기존 도급공사를 지양하고, 장비를 임차하여 시군에서 직접 시행토록 방법을 개선하여 공사비 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자복사기 임차비용 절감을 위한 연간단가 계약 체결**

각 실·과 및 동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복사기를 임차하여 장비 유지 관리에 따른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함은 물론 입찰을 통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함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② 사업집행 변경요인 관리

- 사업 집행과정에서 새로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발견되어 당해 사업에 대한 원가절감이 가능한 경우, 설계변경 추진

예산절감사례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터널 보강방법 개선을 통한 공사비 절감**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는 터널공사구간에 강관다단그라우팅공법과 록볼트시공을 구조적 특성 및 상호 간섭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관례적으로 중복 반영하여 시공하고 있었으나, 록볼트 설치가 오히려 강관과 지반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알고 강관다단그라우팅 시공구간에 록볼트를 제외토록 설계변경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모범사례 –

예산절감사례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터널벽면 세척품질규정 제정으로 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기여**

터널내부 벽면세척시 세척 필요여부에 판단기준이 없었으나, '벽 표면에 대한 빛의 확산반사율' 개념을 도입한 「터널세척 품질규정」을 마련하여 세척회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효과도 거둠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모범사례 –

예산절감사례 **광주광역시 위생처리장 이설공사 공법 개선**

Sheet Pile의 공장생산 규격이 10m인 점과 지하수위가 현 지반선 2m 이하에 존재한다는 것을 착안하여 현 지반에서 Sheet Pile을 근입하지 않고 현재 지반을 1.3m를 깎아내고 Sheet Pile을 근입함으로써
추가로 pile을 연결하지 않고 설계 근입깊이 11.3m를 확보함으로써 Sheet Pile 추가 구입비 등 예산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울산광역시 보도설치 공법 변경

당초 설계(계획)대로 보도설치시 블록식 옹벽설치를 위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시행으로 주간선도로 통행제한(2차로 차단)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타공법으로 대책을 강구

본부에서 시행중인 대형건설현장의 감리와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가인 감리단장, 소장 등의 의견수렴으로 시공계획을 재검토하여 시공성이 용이하고 해안지역 간선도로의 주변경관에 맞게 시공비가 저렴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변경 (블록식 옹벽 → 목재테크)하여 보도를 설치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 사업 집행과정에서 총 사업비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경우, 적정한 설계변경 등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예산낭비사례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당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중요시설(내부순환용 도로, 25m)을 제외하는 등 당초 면적(115,000㎡)보다 15,100㎡가 적은 99,90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한 후 사업 추진

사업시행(도시개발공사) 과정에서 절개지내 소단을 이용, 무리하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녹지→도로)하여 사면 구배가 급해지고, 배수로가 삭제되어 금년 우기시 피해 발생

이로 인해 사면보강에 따른 공사비(426백만원) 추가 소요결과 초래

–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예산낭비사례 ○○천 좌안 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천 좌안 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6,775백만원)'를 '07.6.4 착공하여 추진함에 있어 「하수도 시설기준」이 정한 오수관의 적정 유속(0.6%~3.0%)을 초과하여 설계(최고 9.9%)함에 따라 28개소가 유속범위를 초과하는 결과 초래

하수관의 매설깊이는 차도의 경우 1.2m, 보도의 경우 1.0m로 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1m이내로 낮게 매설한 관거가 전체관거(13,414m)의 76% (10,144m)에 이르며, 경질토 구간에서 연성관거의 경우 기초공은 모래를 자유받침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양호한 지반의 토사로 잔토처리하고 혼합골재로 되메우기 하는 것으로 설계, 263백만원 상당의 공사비 과다계상

–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혹은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이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사업 재검토를 통해 조정

예산낭비사례 **○○청 저장품 창고부지 매입**

○○청은 2004년 저장품 창고 확충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자 창고부지가 필요없게 되었으며, 결국 ○○홍보센터와 교육관 등을 추가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다가 결국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매입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부지매입비를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 국제○○○○○대회 유치 포기**

○○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전속대행사인 ○○○과 대회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03.10.17)해 놓고, ○○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04.1.29)한 결과보고서(총사업비 2,000억원 추정)를 근거로 지방의회에 대회개최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보고서 내용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심사를 보류('04.4.20)하자, 현 지사 취임('04.6.7) 후 예비비 3억2천만원을 투입('04.10.14), 전문기관(3개 기관 공동용역)에 재용역한 결과 총사업비가 3,340억원에 이르자 대회유치 포기를 선언('05. 5.25).

결국,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욕만 앞선 나머지 사전준비 부실로 인하여 동 대회 유치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행·재정적 낭비는 물론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킨 결과 초래

–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 현장여건의 변화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소요자재의 원가나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공사비를 계상

예산낭비사례 ○○도시철도 ○호선 구조물 철근량 설계변경 부적정

○○○○시는 도시철도 ○호선 건설공사를 시행중 건설사업비를 줄일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 전후의 도면을 비교하여 변동되는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공사비를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적정 철근량보다 더 많이 계상하여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청 흙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청은 공사용 가도로 축소 등 현장여건 변화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가도로의 흙돈기량과 본선 우용토 돋기량 등 소요물량을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하여 계약변경함에 따라 공사비 과다 계상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부처 장관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

예산낭비사례 ○○센터 부대시설 조성사업 보조금 목적외 사용

○○도는 위 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내용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 체험센터 설치 사업 추진에 사용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시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국토관리청의 ○○수계치수사업과 구간이 중복되어 사업구간이 감소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당초 사업대상 구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남은 재원은 다른 사업에 집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③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

- 특정사업이나 기관운영 목적의 예산을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예산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

예산낭비사례 **공무원의 공무수행행위를 연구용역 인건비로 계상하여 지급**

○○위원회는 7건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연구용역 수행에 위원회 소속 지방행정사무관 등 6명이 연구원으로 참여, 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당연히 하여야 할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급여 이외에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인건비 1,200만원을 용역대가에 계상하여 지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 –

-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해 예비비·업무추진비 등 경비성격별로 정해진 집행기준 및 절차를 준수

예산낭비사례 **재해복구 목적 예비비 등 업무추진비 집행업무 부당 처리**

○○청은 호우피해 복구목적으로 배정받은 예비비 중 '복구현장 방문 주민위로 및 관계자 격려' 목적으로 배정받은 업무추진비를 경조사 축·조화 구입비, 명절 선물 구입비, 직원 송년회식비 등 청·차장실 일반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용도 등 집행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음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예비비 집행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 등의 목적으로 배정한 예비비를 ○○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 관련 비용 등 재·보궐선거와 관련없는 시설비·비품구입비 등 기관운영 경비로 집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참 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1)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反하여 사업비, 민간지원경비, 경상경비를 일체 집행할 수 없음
  - 이 경우, 국가정책이라 함은 정부가 법령·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일체를 말함

2) 당해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 법규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3)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음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 예외 : 예산의 이월, 지난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지출 등

5)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15조)

- 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예외 : 수입대체경비)

6)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기부금, 보조금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이 제한됨

※ 공공기관 :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해진 공공 기관

예 외

- 개별법령에 기부 또는 보조의 근거가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 이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출자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없음

예 외

-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에 출자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

※ 공익법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제화교류재단 등

8)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음

-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정액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대학자녀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집행
-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 금지

9)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지방재정법 제71조)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예외 : 일상경비 또는 도급경비 출납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한 예산집행

10) 예산 집행절차 준수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관련법령예시

지방재정법령, 지방계약법령, 기금관리법령, 물품및공유재산관련법령,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기타 개별 법령



(4) 사후관리 단계

① 검사·정산 및 잔여재원관리 철저

- 집행잔액을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낭비하거나,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사업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재원 관리 철저

예산낭비사례 **국제화기반조성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부는 국제화기반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을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설립 및 운영비로 집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위원회는 위 선거관리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그 중 일부만 불용처리하고 일부는 예산각목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원 해외연수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사용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 –

- 사업 추진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지양

예산낭비사례 **○○부 청사대수선 공사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2006년까지 7년간 총 74억여원을 투입하여 청사 대수선공사를 시행하고 해마다 청사 개보수공사를 진행, 2003년 노후 기계·전기설비 교체 및 외부 창호교체 등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 되었는데도 2004년과 2005년 예산에 이미 완료 되었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후 사무용 집기교체 등 다른 용도로 집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 –

- 용역성과물의 납품검사, 구매물품의 성능평가 등 당초 계약조건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 철저

예산낭비사례 ○○업무용 개인휴대단말기 도입 추진 부적정

○○부는 개인휴대단말기 보급시, 적정한 성능평가를 통해 제품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험결과를 수용하여 합격처리함으로써, 집배원이 실제 집배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예산낭비사례 바다목장 용역성과물 허위제출 및 검수태만

○○부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하면서 연구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도 않고 과거에 작성된 용역보고서를 베껴 제출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용역비를 전액 지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사업 완료시 당초 계약사항 이행 확인은 물론 사업추진과 관련한 집행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 방지

예산낭비사례 전자도서관 DB 구축계약 금액 정산 불철저

○○도서관은 전자도서관 DB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금액을 정산할 때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② 환류 및 활용

- 사업 추진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 사업이나 유사사업 추진시 기존사업의 낭비요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를 부여

예산낭비사례 **정보화마을 무인민원서류발급기 보급 부적정**

○○부는 2001년 종합적인 수요조사 없이 20개 시범마을에 무인민원서류발급기 25대를 보급하였고, 위 시범마을에 보급한 시설의 사용실적이 월평균 10건 미만으로 미흡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2002년 다시 무인민원서류발급기 74대를 추가 보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집 –

-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에 과도한 예산지출이 소요될 경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재정부담 감소 및 세외수입 확보

예산절감사례 **충북 청원 사업종료 쓰레기매립장 토지환원사업**

사업종료매립장은 20년간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7년이 경과한 상태로 향후 13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실정

매립장부지는 사후관리 종료후 부지 안정화사업 실시 이후에도 공원이나 체육시설 부지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폐기물 굴취소각으로 사후관리비 절감 및 토지의 재활용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광주광역시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사업 추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588억원(국비 341억원, 시비 1,247억원)을 들여 건설된 광주월드컵경기장이 대회 이후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16~20억원 정도의 관리운영비만 소요되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었음.

대형할인점 및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포함)를 유치함으로써 월드컵경기장 관리·운영비용을 모두 충당할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을 통하여 시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있음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 수집·확인사례 –

2. 인건비 절감

(1) 효율적 조직 설계 및 인력 운영

- 직무분석 등 조직진단을 통해 적정한 행정수요에 맞도록 효율적 조직 설계 및 인력 운영으로, 인건비 등 예산절감

예산절감사례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감축 운영으로 인력운영비 절감**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등 증원수요가 발생되었으나,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직무분석과 조직 재설계를 통해 감축한 32명을 신규시책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인건비로 연간 약1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발생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지원부서 등 공통부서의 인력을 감축하고 현안 사업부서 위주로 인력을 운영하여 예산절감

예산절감사례 **인력운영 감축으로 예산절감**

전남도는 도민의 소득증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제부서에 기구와 정원을 보강하는 대신, 일부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인력을 감축 운영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2)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

-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을 통한 인력운영비 절감

예산절감사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전문기관위탁 전환으로 예산절감**

충북 단양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탁토록 하고 2008. 7. 1부터 공무원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연간 인건비 등 542백만원 절감 예상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건강보험료 부담금 산정기준 등 각종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여 인력운영비 부당 지출을 예방

예산절감사례 **소방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절감**

경북도는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중 실비 보상적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제외되어야 하나 이를 포함하여 신고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로 130백만원 상당의 부담금을 환급받음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대민행정현장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활성화하여 인력운영비를 절감하고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도서구입 등 운영비로 활용

예산절감사례 **도서관 관리위원 양성배치를 통한 예산절감**

대구시 수성구에서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서전문교육 이수 후 도서관 운영인력(89명)으로 활용하고 정규직원은 소요인원의 30% 정도만 배치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등 연간 1,259백만원을 절감하는 효과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3. 에너지 절약

(1) 공공건물 관리

- 전기사용이 사실상 불필요한 시간대에 낭비되는 전기는 없는지 각자가 주변을 살펴서 전기를 절약하는 실천운동을 전개

예산절감사례 **중식시간 PC 끄기 운동전개**

대전시에서는 중식시간중에 종래에는 「모니터 끄기」를 「PC 끄기」로 실천하고, 동 시간대에 실행되던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도 13:30분에 실행하여 연간 15백만원 정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대용량의 전력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유휴전력량이 많거나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예산절감 실천

예산절감사례 **경부하시간대 취·정수장 펌프가동**

대전시에서는 시간대별 전기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심야시간)를 최대한 활용하여 취수펌프를 가동하여 물을 생산함으로써 연간 1억원의 예산절감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작은 예산투자나 아이디어로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고안하여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도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 등의 대기전력으로 인한 전력낭비와 화재를 예방

예산절감사례 **사무실 일괄 전원차단장치를 통한 전기료 절감**

사무실에 카드키를 설치하여 점심시간, 퇴근 후 장시간 사무실을 비울 때에는 카드열쇄를 빼내면 사무실내 모든 전원이 차단되어 매년 10%의 전기요금 절약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청사에 대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절약 기반구축 및 실천 분위기 조성

예산절감사례 청사에너지 절약대책 추진

경북도에서는 23개동 7,865평의 사무실 등에 대하여 자동전등 스위치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절약 시설을 개선하고 에어콘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연간 청사 에너지 사용 예산의 30% 정도인 2억여원을 절감할 계획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일반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작은 인센티브를 직접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생활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유도

예산절감사례 「Energy Mileage제도」 시행

부산시에서는 범시민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 생활속의 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Energy Mileage제도」를 시행, 지난해 7~9월 대비 금년도 같은 기간의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여 유인하는 등 동참 분위기 조성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 정부의 에너지합리화자금에서 지원받아 선투자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에너지 절감예산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

예산절감사례 보안등 시설을 ESCO사업으로 추진으로 에너지·예산절감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관내보안등 2,381개소, 가로등 1,350개에 대하여 ESCO 사업으로 추진(사업비 7억원)하여 연간 2억원의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상환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기여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2) 공용차량 관리

-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2008-5호, '08.7.7)」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공용차량 관리 등 대책을 마련

예산절감사례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마련**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개선 계획(행정안전부, '08.6)에 따라 서울시 등에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고, 관용차량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관용차량의 50%를 감축 운행

– '08.7.18 부시장·부지사 회의자료 –

- 초고유가 시대에 범국가적 에너지 절감 실천에 자치단체가 솔선 참여하고 소속 직원들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

예산절감사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절약 추진**

광주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홀짝제 외에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청사내 차 없는 날"로 지정·운영하고, 출·퇴근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

– '08.7.18 부시장·부지사 회의자료 –

- 에너지 절약,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개인택시를 업무용 차량으로 임차 운영하여 예산절감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예산절감사례 **개인택시 업무용차량 임차 운영**

전라북도에서는 2007년도부터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개인택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1일 5대의 개인택시를 업무용 차량으로 임차하여 직원들의 관내·외 출장에 활용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증가로 유발된 교통체증, 주차난,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함께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를 기대

예산절감사례 자전거 특별시 창원

경남 창원시가 자전거 전용도로 및 교차로, 자전거 우선통행선 설치 등 무공해 녹색 교통수단 대중화에 앞장서 에너지 절약시책을 실천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초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시책으로 적극 추진

예산절감사례 자전거 타기 활성화 추진

전북도에서는 2015년까지 자전거 수송분담율 1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1,200대의 자전거를 보급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케 하고, 관용 자전거제를 도입하여 출·퇴근자나 관내출장자 등이 활용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유비쿼터스 IT를 접목하여 시민들 누구나 자전거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도시조성

예산절감사례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조성

고양시는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프랑스(파리)에서 시행중인 공공자전거 시스템(밸리브)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자동차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제공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제공 –

- 구민들에게 올바르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을 교육시켜 자전거 인구의 확산을 유도하고 자전거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범시민운동으로 추진

예산절감사례 상설교육장 운영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천 오정구는 구민(주부)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면허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발급하는 등 자전거타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제공 –

예산절감사례 자전거교실 운영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서울 강동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교실 운영(3월~11월)을 통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타기 분위기 조성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제공 –

- 자전거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교통수단임을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조기에 교육함으로써 자전거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록 유도

예산절감사례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운영

경북 상주시는 초·중·고 각 1개교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어릴적부터 자전거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전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등 자전거 이용을 독려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제공 –

-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 등 유도

예산절감사례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서울 송파구는 4개구역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100여대 비치)를 운영하면서 누구에게나 대여하여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율 증대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제공 –

4. 수입 확충

(1) 지방세 확충

- 지방세 고액 체납액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금융조회,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 해소 역할 강화

예산절감사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고액체납액 징수 T/F팀 운영**

강원도에서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징수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전국적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징수경비를 절감하고 징수율을 높여 세수증대 효과 거양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세입 징수 증대에 대한 성과포상 인센티브 등 유인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세수증대 도모

예산절감사례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도 확대에 따른 세수증대**

강원도에서는 도세입 징수에 대한 개인별 징수포상금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37억원이 증대되고 체납액 징수율이 7%이상 제고됨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

예산절감사례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 전담공무원 지정**

충남도에서는 도와 시·군 세정업무담당공무원 300명을 고액 상습체납자 300명에 대한 전담 관리요원으로 지정하여 '07년 이전 체납액 445억원 징수를 위한 부동산 조사, 출국금지, 부동산 경매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34억원을 징수하는 등 수입증대 기여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 납부독려 등 활동 전개

예산절감사례 **체납액 징수할당제 도입**

울산 남구청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5급 이하 전직원에게 평균 18백만원의 체납액 징수 할당제를 도입하고, 우수부서 및 직원을 시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납부 분위기를 고취하여 수입증대 기여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지방세 전자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동기 부여 등을 위해 '모범 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징수비용 절감 및 지방세 수입증대 유도

예산절감사례 **지방세 전자납부자 500원씩 교통카드 충전**

부산시에서는 지방세 전자납부활성화와 납부독려를 위해 온라인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제작·송달에 해당하는 비용(건당 500원)을 납세자 교통카드에 충전·환원함으로써 고지서 제작·발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납세를 촉진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지방세 체납자중 체납액 납부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선별하여 경제활동과 함께 지방세 분납의 기회를 제공

예산절감사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제 구제**

부산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관리되는 납세자 중에서, 체납액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 일정액을 납부하고 분납계획을 제출하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고 체납자가 지역경제 활동에 기여하고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수입증대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해 읍·면간, 마을간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세 체납액 없는 마을을 포상

예산절감사례 **지방세 체납액 없는 마을 포상**

횡성군에서는 지방세 징수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과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상사업비 및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읍·면간, 마을간 경쟁 유도 및 지방세 납부동기를 유발하여 수입증대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참 고 : 지방세수입 증대방안(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 업무개요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연 2회, 시도별 자율 운영) 및 자치단체별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세수전망 분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요청·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 법인 세무조사 및 감면지방세 사후관리 등 탈루·은닉세원 조사

■ 업무 추진근거

- 지방세법(제28조, 제64조 등), 자치단체 세무조사운영규칙, 2008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

■ 업무처리 절차

- 세수전망 분석 → 자치단체별 징수대책 보고회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수립 → 일제정리기간 운영(개인별·기관별 체납액 징수 목표설정, 방문징수 등) → 압류재산 공매처분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요구 등
- 법인세무조사 계획 수립 → 법인별 세무조사 → 과세예고(과세전적부심사) → 추징
- 지방세 감면신청 → 감면결정 → 감면액에 대한 사후관리(일제점검 등) → 추징(감면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 예산절감 착안점 및 점검사항

- 체납액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실적 및 징수노력도(계획수립의 적합성, 압류재산 공매처분실적, 명단공개·출국금지 실적, 관허사업 제한 실적 등)
- 감면지방세 사후관리 실태(계획수립여부 및 실적 등)

(2) 세외수입 확충

- 주택 재개발사업 지구내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공유재산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하여 수입 증대

예산절감사례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내 시유재산 재평가 매각**

대전시에서는 주택 재개발사업 지구내 매각대상인 시유재산 2필지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재감정 평가를 통해 매각금액을 조정하여 57백만원 정도 수입증대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감정평가액 반영에 노력하여 세입 증대

예산절감사례 **국·공유지 매각시 감정가 반영**

대전시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저가로 매각되지 않도록 시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감정가액에 반영되도록 추진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지역별 특성,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

예산절감사례 **버려질 철도활용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일부 기능이 상실된 철로 일부 구간을 레일바이크로 관광상품화 하여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많은 기여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민간기업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각열 판매를 제안, 지역 난방열 공급설비를 설치하고 판매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

예산절감사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소각열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LG Power(주)와 협의하여 지역 난방열 공급설비를 설치하고 판매를 시작하여 '07년도의 경우 26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킴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제공 –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시 개발비용 산출내역에 대한 원가심사를 철저하게 실시 정당한 부담금 부과 등 관리 강화

예산절감사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로 세입예산 증대**

대구시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비용 산출내역에 대한 토목공사 원가심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부과하고, 체납금 징수업무를 철저하게 하여 수입액을 증대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도로점용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된 시설물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 징수

예산절감사례 **도로점용시설물 일제정비로 수입증대**

부산시에서는 시 및 군·구 합동으로 지상·지하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 도로상 시설물 중 점용료가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여 시 126억원, 구 120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세외수입 관련 개별법령 등을 연찬하여 공유수면 점·사용권에 대한 부과시점 및 면적에 대한 재검토로 세외수입 증대

예산절감사례 **공유수면 점·사용료 추가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

경주시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권에 대한 부과시점을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처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여 당초 2억원을 납부하겠다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법률팀과 협의하여 40억원으로 상향 조정 부과하여 38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건축법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 관리하여야 하나 사후관리를 태만히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소홀히 함

예산낭비사례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도내 7개 시·군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024백만원을 미부과

–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정상지가 상승분 산출을 잘못하여 수입액 감소 초래

예산낭비사례 **개발부담금 산정 부적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사업이고, 매년도 정상지가 상승분은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지가에 당해년도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예금이자율(8%) 중 높은 값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주)○○가 시행한 ○○ 골프장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인접 골프장 개발이 반영된 개별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14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 미부과

–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장을 조성하여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일반 납세자의 납세의식 개선 유도

예산절감사례 **체납차량 공매처분장 조성**

울산시에서는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장(사업비 123백만원)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납세의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공매를 통해 '07년의 경우 356백만원의 지방세 수입증대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용방식을 전기이용 광고판으로 통합 개선하여 세외수입 증대

예산절감사례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개선**

대전시 대덕구에서는 지정게시대 운영방식을 일반현수막 게첨방식에서 전기이용 광고판으로 변경하여 일괄광고토록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연간 78백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증대됨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제공 –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한 스티커구입시 주민불편문제 등 수수료 징수방안을 개선하여 세외수입 증대

예산절감사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징수방안 개선**

대전시 대덕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징수방법을 기존의 스티커 방식에서 전화요금 병기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KT와 수납대행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스티커 제작비 및 효율적인 수수료 징수로 856백만원의 세외수입이 증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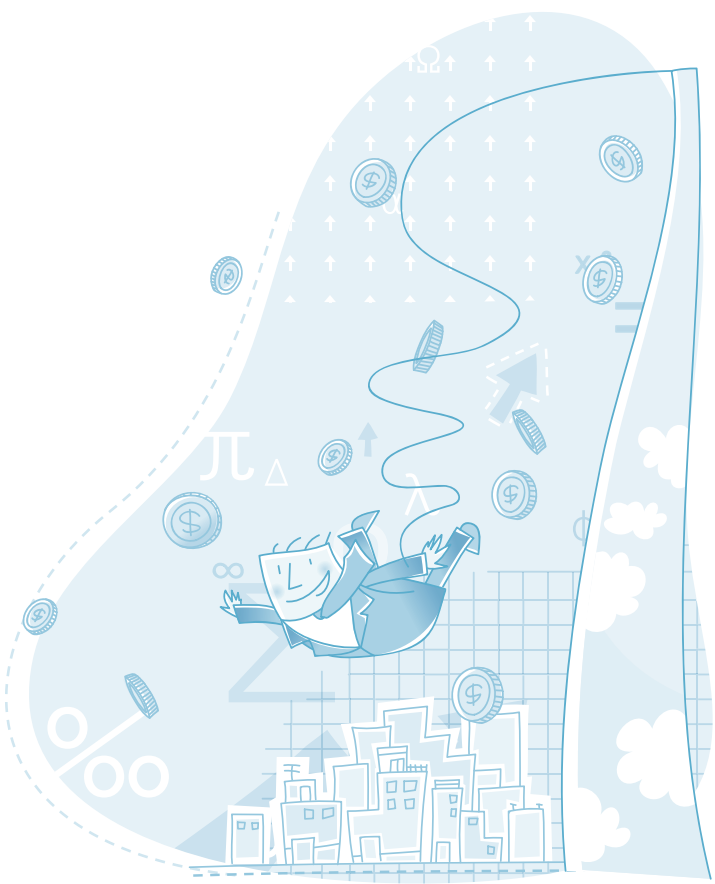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제공 –

- 불법 투기된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이 증가

예산절감사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거부 제도 시행으로 세입증대**

울산광역시에서는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 수거를 거부함으로써 주민의식 변화와 함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증대로 연간 522백만원의 판매실적이 증가하였고, 음식물과 혼합된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에 기여하고 판매수익이 월10% 이상 증가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제공 –



5. 기타 재정관리 효율화

(1) 채무관리 개선

- 원화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금리가 낮은 저금리 외화를 차입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차입이자비용 절감

예산절감사례 **엔화와 원화의 금리에 따른 엔화 조달추진으로 예산절감**

제주도에서는 '97년 당시 엔화와 원화의 절대 금리차를 이용하여 엔화 조달(1,577억원)에 성공함으로써 원화채권 발행시보다 10년간 약 1,388억원의 차입비용 절감 효과

*국내시장 조달금리 13%, 엔화 조달금리(환차손 포함) 3.835%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환율변동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환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관리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전담팀을 운영

예산절감사례 **서울시 환위험관리지침 마련 등**

서울시에서는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외화자금 관리를 위해 미리 환위험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별도의 관리팀을 두어 환위험에 따른 햇지 등 업무수행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거나 이자율이 낮은 차입선으로 변경, 또는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시기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자부담 경감

예산절감사례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이자부담 경감

울산시에서는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활용,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공단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 273백만원을 절감,
이자율이 낮은 차입선 변경으로 중산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이자 454백만원, 지방채 발생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제공하여 499백만원 등 절감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이자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고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무활동비를 절감

예산절감사례 지방채 차입선 변경 및 적기 발행을 통한 재무활동비 절감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06.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대부분이 이월이 예상되어 자금없이 이월 처리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방채를 50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당초 4.84%의 시중금리에서 4.0%의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방채무를 최소화 한 것은 물론 이자 부담액을 10억원 이상 절감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참 고 : 지방자치단체 환위험관리 매뉴얼

Ⅰ 환위험의 개념

1. 환위험 노출(Exposure)

- 환위험이란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하락(또는 상승)하여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대외거래의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의 시간적 차이 또는 결산서 작성 시 환평가에 의해 발생

- 환위험 노출이란 환율변동에 노출된 외화 순 자산 또는 순 부채(net exchange position)와 현금흐름의 순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

  ⇒ 환차손과 환차익의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는 중립적 개념

- 외국환 포지션(FX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square(flat)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2.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

- 지자체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내차입금보다 낮은 금리 이점을 이유로 대규모 외화 차입금을 보유

  ※ '04년말 현재 3,721억원(30백만 USD, 337억 JPY)의 외채 보유

- 외화 자산과 부채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일반기업에 비해 외화부채의 비중이 높고 기간도 길어 구조적으로 환위험에 노출될 우려

※ 감사원 감사결과(2004. 4)

– 지방자치단체는 '79년부터 '02년까지 1조 7,072억원(미화 4억 5,632만여 달러, 엔화 1,670억여 엔, 독일화 1천말 마르크)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 6,358억여원의 환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

Ⅱ 환위험 관리방법

1. 개 념

- 환위험 관리는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에서 초래되는 환위험을 최소화하거나 환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부·외부적인 관리전략 또는 기법 일체를 의미
- 환위험 관리기법에는 조직 내부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내부적 관리기법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대응거래를 통하여 환위험을 경감 또는 전가시키는 외부적 관리기법이 있음

2. 내부적 관리기법(Internal Management Techniques)

가. 매칭(matching)

- 외화자금의 흐름, 즉 자금의 유입과 지급을 통화별·만기별로 일치(matching)시킴으로써 외화자금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
  -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외국통화간 선물환거래를 이용
- 환위험에 노출된 외화채권·채무와 반대의 새로운 포지션 창출
  - 외화채권 초과시 : 외화차입
  - 외화채무 초과시 : 외화예금

나. 리딩과 래깅(Leading & Lagging)

- 리딩과 래깅은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외화자금의 결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leading) 또는 지연(lagging)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극대화하거나 환차손을 극소화하는 기법
- 리딩과 래깅은 그룹기업간에 용이하게 발생,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어느 일방이 이익을 실현하면, 타방은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임

다. 상계(네팅, Netting)

-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이들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 그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
- 네팅에는 양자간 네팅(bilateral netting) 이외에 3개 이상의 자회사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네팅(multilateral netting)이 있음

라. 환차손준비금

- 환차손준비금은 장래의 환차손 발생에 대비하여 이익의 일부를 환차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환차손이 발생하면 동적립금을 환차손에 충당하는 제도
- 환차손준비금제도는 사전적인 환위험 관리기법이라기 보다는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이를 일정기간에 이연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간의 이례적인 경영성과 왜곡을 평준화하는 회계제도

※ 외화채무의 상환을 위한 지자체가 적립하는 감채기금도 환차손준비금의 성격이 있음

3. 외부적 관리기법(External Management Techniques)

가. 선물환(Forward Exchange)

- 선물환거래는 외환 매매 쌍방이 일정시점에서 일정통화를 당초 계약일에 약정한 환율로 환산하여 受渡·決濟하는 거래
- 선물환거래는 장래 일정시점의 외환 매매거래에서 적용할 환율을 현재의 시점에서 확정함으로써 거래시점과 결재시점간의 환율변동에서 초래되는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헤지 수단
- 선물환거래를 이용하여 환위험을 경감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선물환 헤징비용(또는 스왑레이트)이라 함

※ 결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연불수출입, 장기외화채권·채무결제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기선물환거래가 이용

나. 통화선물(Currency Forwards)

- 선물환거래와 유사하나 표준화한 상품*으로서 한국선물거래소('99.4월 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하여 시장참가자간에 호가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선물가격으로 일정기간 후에 원화를 대가로 미 달러화를 인수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거래단위 : 1계약당 5만달러
결제월 주기 : 당월물 포함 3개월 + 3, 6, 9, 12월(총 6개)
거래 수수료 : 계약당 8,000원(법인은 대부분 5,000원)

- 현물거래와 반대의 선물매입 또는 매도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선물포지션의 청산에 따른 이익(또는 손실)으로 현물거래의 손실(또는 이익)을 상쇄

⇒ 환율상승(해당 통화의 강세) 위험 : 선물매입(long hedge),
환율하락(해당 통화의 약세) 위험 : 선물매도(short hedge)

다. 외환스왑(Foreign Exchange Swap)

-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거래

- 일반적인 스왑거래는 일정 외한을 현물환시장에서 매입(매도)하고 동시에 선물환시장에서 매도(매입)하는 거래 형태(spot forward swap) 임

라. 차액결제선물환(Non-Deliverable Forward)

- 차액결제선물환(NDF)계약은 만기에 계약원금의 상호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fixing rate)간의 차이만을 지정통화(미 달러화)로 정산하는 선물환계약

- NDF거래는 만기에 차액만을 결제하므로 두 통화를 총액결제 하는 일반 선물환계약에 비해 결제위험(settlement risk)이 상대적으로 낮음

마. 통화옵션(Currency Options)

- 상호 약정한 환율(strike price)로 외국통화를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option)*를 매매하는 거래

*call option : 외국통화의 매입권리, put option : 외국통화의 매도권리

바. 범위선물환(Range Forward, Zero-Cost Option)

-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매도가격을 일정환율로 팔 수 있는 put option을 매입하는 한편, 일정환율이상 상승시 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아야 하는 call option을 매도하는 거래
- call option 매도에 따른 수취 프리미엄과 put option 매입에 따른 지급 프리미엄이 서로 상쇄되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zero-cost option이라 함

사. 통화스왑(Currency Swap)

- 거래당사자간 보유외환자산이나 부채를 서로 필요로 하는 통화로 매매하고 만기에 계약당시 환율로 원금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거래임
- 일반적으로 통화스왑은 채권(bond)발행과 연계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자가 각기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한 후 통화스왑을 통해 필요한 통화로 교환

아. 환변동보험

- 선물환거래와 유사하나 보험계약 형식으로 수출보험공사에서 운영
- 기업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만기시 시장환율이 계약환율(보장환율)보다 낮을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차액을 업체에 보전해 주는 반면, 시장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출보험공사가 차액 환수

※ 환변동보험과 유사한 환변동공제의 개발을 검토하였으나, 시장성 부족으로 곤란

Ⅲ 환위험 관리방안

1. 개 요

- 환위험 관리는 개별 지자체의 외화자산·부채 구조와 위험 노출 정도, Cash Flow 등에 따라 상이
-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고비용의 첨단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외환거래 규모, 위험 특성(risk profile)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
- 환위험 관리수단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또한 관리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환위험을 헤지할 때에는 각종 헤지수단(hedge tools)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2. 관리방안

- 외환 관련 전문기관*의 컨설팅 또는 지자체금고와 협조하여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 검토

  * 산업은행(금융공학실), 한국은행(국제금융부), 사설 컨설팅 기관 등

- 환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외화 부채 규모가 크고 상환기간이 곧 도래하는 경우)

  – 감채기금 적립, 내·외부적 환위험 관리방안 등 강구

  ※ 필요시 외환 전문가 등으로 환위험관리위원회 구성



(2) 공유재산 관리개선

◎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시점을 부동산이나 건설경기 등을 검토하여 매각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예산절감사례 **도유재산 적기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

전남도에서는 도청 이전으로 용도 폐기된 도유재산(7필지 21,698㎡, 7동 3,264㎡)을 매각함에 있어 부동산 및 건설경기 등을 분석 검토하여 매각시점을 결정하고 매각대상재산의 가치 등을 집중 홍보하여 재산적 가치를 높이고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예정가격 189억원보다 158억원이 많은 347억원으로 낙찰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하천부지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 수입 증대

예산절감사례 **하천부지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구 달성군에서는 하천부지에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잔디를 식재한 자에게 당해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73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와 함께 수입 증대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 공유재산임을 증명하여 공탁금 수령으로 수입 증대

예산절감사례 **소유자 불명재산으로 공탁된 공유재산 소유권 입증**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무실택지개발사업부지내 사실상 관리되지 않는 재산을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불명재산으로 분류하고 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발견하여 원주시 소유임을 입증 공탁금 285백만원을 수령하여 수입 증대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관리되지 않는 누락재산 등을 발굴하여 수입증대 등 기여

예산절감사례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미관리 재산을 색출**

충남도에서는 시·군 담당공무원과 함께 등기전산자료 및 지적전산자료, 재산관리대장상의 자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재산 1,809필지 951천㎡(장부가격 184억원)을 색출하여 수입증대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은닉 및 누락된 공유재산 발굴 및 적정가 매매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예산절감사례 **은닉재산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전북 익산시에서는 건물은 익산시로 등록되어 있으나, 대지권은 25년간 미등록된 은닉재산에 대한 관련서류를 확보하여 관련기관(주택공사)과 협의 대지소유권을 이전받아 재정확충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예산절감사례 **상업용지의 개별필지를 일괄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

장기 미 매각 상업용지 36필지 39,000㎡를 개별필지 매각에 따른 난개발 및 잔여토지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1인에게 일괄매각을 하여 예정가액보다 12,510백만원 수입 증대 효과

– 예정가액 128,590백만원 ⇒ 낙찰가격 141,100백만원(약 11% 증)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예산절감사례 **어항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재산 발굴**

경남 거제시에서는 어항시설을 전수 조사해 미등록된 어항을 찾아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20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예산절감사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재산 발굴 및 수입 증대**

전북도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유휴재산 4,797필지 176만7000㎡와 무단점유재산 152필지 7만3000㎡를 발굴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도모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예산절감사례 **건축이 중단된 숙박시설 부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수입 증대**

건축허가 취소 처분된 숙박시설을 시에서 매입을 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고 입찰가 세외수입 증대

– 매입가 : 2,681백만원
– 숙박시설 철거비 : 100백만원
– 감정가액 : 2,690백만원(건물 493백만원, 부지 2,197백만원)
– 매각금액 : 3,910백만원(매입가액 대비 1,229백만원 이익)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예산절감사례 **경쟁입찰을 통한 임대수입 증대**

동두천시에서는 건립한 지 30년된 노후 상가를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하여 연간 대부료가 29,474천원에 불과하였으나, 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연간 대부료가 93,492천원으로 수입증대(310%)

※ 규모 : 부지면적 891.52㎡, 연면적 845.82㎡ / 상가수 8개소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공유재산 매입시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직접 수행하여 예산절감

예산절감사례 **공유재산 매각을 직접 수행하여 예산 절감**

전남도에서는 편동산단에 편입된 대체농지를 직접매입방식으로 변경하고 소유권 이전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해 공유재산 17.4ha를 취득하고 위탁수수료 5,400만원 절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 공유재산 관리·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공유재산 부가가치 창출 및 무단점유자 색출 등 세외수입 증대

예산절감사례 유휴재산의 적극 발굴을 통한 활용도 증가 및 수입 증대

서울 서초구에서는 잠자고 있는 유휴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유휴 공유재산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도 증가시켜 수입증대 도모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예산절감사례 공유재산관리도 제작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대전 동구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도 제작을 통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578필지 224,800㎡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소유자별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작업을 통해 무단 점용된 토지 11필지 발굴하여 24,000천원의 변상금 및 점용료를 부과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예산절감사례 사용대부료 등 세외수입 고지 방법 개선으로 지방세 수입 확충

충북 제천시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세외수입과 관련 인터넷 지로전자 납부제를 도입하여 고지서 없이 안방에서도 세외수입을 낼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주민편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고지서 분실, 훼손 등에 재발행 비용 절감과 체납액 감소 효과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 공영 주차장, 복지회관, 운동시설 등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수익 구조 관리

예산절감사례 구내식당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경쟁입찰로 세입예산 증대

청사내 구내식당 운영자를 수의계약이 아닌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입찰로 선정하여 세입예산 증대 및 서비스 질 향상

– 사용료 예정가 6백만원 ⇒ 낙찰금액 20백만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직무상 발명한 특허출원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예산절감사례 **효사랑 음악벤치 특허 출원으로 세외수입 확충**

광주시 남구에서는 벤치에 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사람이 앉으면 좌판과 등받이가 따뜻하게 가열되면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효사랑 음악벤치」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고 기업에 특허권을 출원하여 세외수입 확충

- 특허출원 선금 2,000만원, 향후 10년간 총 매출액의 3% 사용료 징수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예산절감사례 **봉선화 추출물로 개발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특허권 지분 확보**

광주시 서구에서는 봉선화 추출물로 개발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의 특허권 지분을 50%를 확보하여 비누 등 아토피 치료 제품의 매출액의 3% 특허권 사용료를 5:5 지분 징수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예산절감사례 **U-2형 복공판의 통상실시권 판매를 통한 건설공사 현장 예산 절감**

서울시에서는 직무발명으로 개발한 미끄럼방지 복공판을 제3자에게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기존 강재복강판에 비해 강재 사용량을 30% 절감하여 공사원가를 낮추고 예산절감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제공 -

(3) 자금관리 개선

-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탄력적으로 예치·운용하여 수익률 극대화

예산절감사례 통합관리기금 수익률 제고

강원도에서는 저축기간에 제한이 없고 년4~5%의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초단기 안정적 국공채(MMF)에 투자예치로 높은 이자수익을 확보하여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예산절감사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춘천시에서는 특별회계 지출준비금이 경우, 자금의 유동성 확보는 물론 이자수입 증대가 가능하도록 분산 관리되는 지출대기자금을 통합하여 MMDA예금상품에 예치하여 보통예금 계좌보다 2.05%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연간 1억8천여 만원의 추가 이자수입 발생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자금에 대하여 최고의 이자수익률을 달성하도록 자금 배정 및 운용에 전문성을 높임

예산절감사례 통합관리기금 수익률 제고

충북 보은군에서는 지출 1일전 자금배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배정으로 각 부서의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고 고수익의 장단기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예치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회계별로 세입, 세출을 구분 관리하여 비효율성과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저리로 운영되던 자금을 통합자금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자수익 증대

예산절감사례 통합자금 관리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을 고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관리 마법사 프로그램에 재정관리를 적용함으로써 1%의 이자수익을 3.55%로 끌어 올려 전년 대비 2억5천만원의 자금운용 혁신을 도모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제공 –

(4)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회계직 공무원의 비리, 상급자의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철저한 내부통제 수행을 통해 회계부정 방지

예산낭비사례 허위 영수증으로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자금 부당인출 집행

주러시아대사관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대사관 청사를 신축하면서 부대비를 예산항목에도 없는 러시아정부 관계자 등을 접대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지출후 신축담당 자신이 수령하여 용도불명하게 사용, 후임 신축담당도 식당영수증을 허위로 작성 미화 2,220달러를 인출 이 중 대부분을 전임자 유흥주점 외상술값으로 변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낭비사례 –

예산낭비사례 특정회사 제품 구입 등 회계질서 문란에 의한 예산낭비

○○천 1차 하천정비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지체상금(8백만원) 부과 없이 준공처리하면서 임의로 접수일자를 위조하였고, 준공검사도 형식적으로 처리하였으며 관급자재인 조경석을 납품검수 함에 있어서도 지체상금을 부당면제하기 위하여 접수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또한, 호안브럭을 구입함에 있어 조달구입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회사 제품을 구입하여 129백만원의 예산낭비

○○천 하천정비공사에서는 식생매트를 설계(64백만원)와 다르게 잔디씨가 없는 불량제품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사업효과가 반감(잡초무성) 되었고, 조달구입토록 되어 있는 호안브럭(129백만원)을 조달청과 협의도 없이 사급으로 전환하여 특정회사 제품을 구매하면서 3천만원의 예산낭비

–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주요지적사례 –

참 고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Ⅰ 의 의

-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함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제6461호, 2001. 4. 7)

-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기타 공법상의 특별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 회계관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여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주의 의무를 요구
  - 회계관계직원은 현금이나 물품, 재산 등을 직접 보관, 관리하고 있으므로 직무수행의 적정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회계관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직무수행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자 하는 "예방적 목적과", 일단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재산상의 손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하는 "손해배상의 목적"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

Ⅱ 책임의 종류

가. 변상책임

-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짐

-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지고, 그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칠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지며,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봄

나. 징계책임

- 공무원이 법령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 이는 신분상 제재이므로 손해보전을 위한 변상책임과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여 병과 가능

다. 형사책임

- 공무원은 형사법규위반시 또는 직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변상책임과는 목적과 기능, 책임의 성립기초가 다르므로 병과가능

Ⅲ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가. 변상책임의 주체

- 회계사무집행자(징수관,경리관,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물품사용공무원) 및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보조자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회계사무집행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보조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정 하고 있어 회계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이 해당됨

나. 변상책임의 조건

-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
- 경리관, 물품관리관 등 명령관계 회계직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고
- 지출원, 물품출납원 등 출납관계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못하는 한 변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Ⅳ 변상책임의 종류

가. 단독변상책임

- 회계관계직원 1인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나. 공동변상책임

- 2인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짐
-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할하여 책임을 지며, 각자에게 판정된 금액을 변상하면 그 책임은 그 자에 한하여 면함

다. 연대변상책임

-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행위를 하도록 명령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상급자와 회계관계직원이 연대하여 변상책임이 있으며 연대변상책임은 전부가 변상되어야 각자의 책임이 면제됨
- 그러나, 회계관계직원이 위법한 지시 또는 요구를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요구의 그 회계행위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지나, 직원이 상급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Ⅴ 변상판정 및 구제절차

가. 변상판정 및 명령

-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실심리 판정
- 소속(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변상판정서 송부
  - ☞ 변상명령은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판정에 의하여 행하거나 판정전이라도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음

나. 변상판정 구제절차

(1)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 변상판정에 불복(변상판정을 받은 자가 판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변상판정서 도달일로부터 3월 이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 ☞ 감사원이 변상책임 없다고 판정하면 기납부한 변상금은 지체없이 반환해야 함

(2) 법원에 재판 청구

- 감사원의 재심에 불복시
-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 제기

(5) 신용카드 사용

-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클린카드제 시행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회계질서를 확립

예산절감사례 **민간보조금 결재전용카드제 실시로 세수증대**

대구시에서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등록·조회·정산업무 등 전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0.6%)를 시 세입으로 적립하여 세외수입도 증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8호)

– 예산절감지원단 지원활동시 수집·확인사례 –

- 법인카드 월중 결제 회수를 조정하여 수입증대

예산절감사례 **농협과 제휴 카드 결제일을 조정하여 수입증대**

장흥군에서는 농협과 제휴하여 법인카드 결제일을 월1회에서 월2회로 조정하고 이용금액의 1.0%를 적립하여 군 세입으로 처리

– 자치단체 제출 우수사례 –

- 업무용신용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카드사용 실적에 따른 현금으로 적립이 가능한 포인트를 세입 처리하여 수입증대

예산절감사례 **업무용신용카드 사용범위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울산광역시에서는 신용카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예산과목을 확대하여 마일리지, 포인트 등 적립실적을 세입 처리하여 '06년도의 경우 124백만원에서 '07년도는 521백만원으로 397백만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가 발생됨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제공 –

참 고 : 신용카드 사용요령

Ⅰ 신용카드 사용대상

일반운영비(201) 급량비는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임의 적용

가.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매,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수수료, 임차료, 연료비, 직원능력개발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제작비

-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 지급대상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자 또는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직장교육 참가자중 단체 급식을 요하는 경우
    ※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지급단가 : 7,000원 이내/식·1인 이내로 함

나.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여 비(202) 임의적용

가. 국내여비(202-01) 또는 국외여비(202-03)

- 국내여비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서 여비정산 근거가 있는 경우 여비정산(숙박비, 교통비)

업무추진비(203,205) 의무적 적용, 다만 1백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임의적용

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

재 료 비(206) 임의 적용

- 재료비(206)
  -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연구개발비(207) 임의 적용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보상금(301) 임의 적용

1. 외빈초청여비(301-08) :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카드로 집행

  ※ 연회비, 선물비, 환송·환영행사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카드로 지급하되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집행이 가능

2. 행사실비보상금(301-10)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의무적 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신용카드사용

3. 기타보상금(301-12) : 임의 적용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시설비및부대비(401) 임의 적용

- 시설부대비(401-03)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405) 임의 적용

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
- 공관 및 관사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나. 도서구입비(405-02)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자상거래 임의 적용

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시 가능
  -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 검사·검수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후)
  - 물품제조·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③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제출 ⇒ ④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카드 번호 입력) ⇒ ⑤납품(택배 등) ⇒⑥ 검수·검수 ⇒ ⑦ 카드대금지출(1개월후)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 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Ⅱ 신용카드 발급절차

〈 법인용 신용카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한다.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신용카드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실과 주무담당이 개설

  –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 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 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발급사용 가능(이 경우에도 1개 계좌원칙 적용)
  - 출장여비 정산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신용카드와 달리 숫자에 제한없이 "지방자치단체 여비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는 민간 법인카드와 구별·관리 될 수 있도록 아래 3가지 도안 중 자치단체 형편에 맞는 도안을 선택하여 제작한다.



(1안)



(2안)



(3안)

※ 기존카드를 전면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도안카드로 교체해야 함

-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신용카드발급상황을 종합관리

Ⅲ 신용카드 사용절차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가능
-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집행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재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용도로 사용한다.

-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신용카드 사용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공채의 매출대상이되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카드대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채권대금 만큼 공제처리할 수 있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Ⅳ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재한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법인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 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통보)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

  ※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경리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원 이상 카드사용내역은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해야 함

